

社說

지역신문기금 예산 축소는 시대적 퇴행이다

지방소멸 현실화와 함께 지역언론도 위기를 맞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신문협회와 한국지역신문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소멸과 코로나19라는 복합적 위기 아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탁상공문식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를 통해 규모가 가장 큰 구독료 지원사업(소외계층 및 NIE)을 전년 대비 10억 5천만원 삭감했다.

구독료 지원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독자인 청소년 세대들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 사업으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은 2위, 신문활용

교육(NIE) 구독료 지원은 3위를 차지,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특별법에 따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비율이 8대 2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지역 간 매체 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기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몫을 맡아왔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모토인 ‘지방시대’ 구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인 것이다. 즉각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005년 2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계속 줄어들면 안된다. 올해는 80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지역신문발전기금법 상시화 개정에 따라 기대가 적지 않았다. 늘려도 부족할 판이다. ‘지역언론 홀대’라는 지적을 되새기길 바란다.

전기차 증가하는데 충전방해 단속 걸돈다니

전기차 충전방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장시간 주차,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시설 훼손, 충전구역 표시를 훼손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행위’란 완충 충전시설의 경우 14시간 이상, 급속은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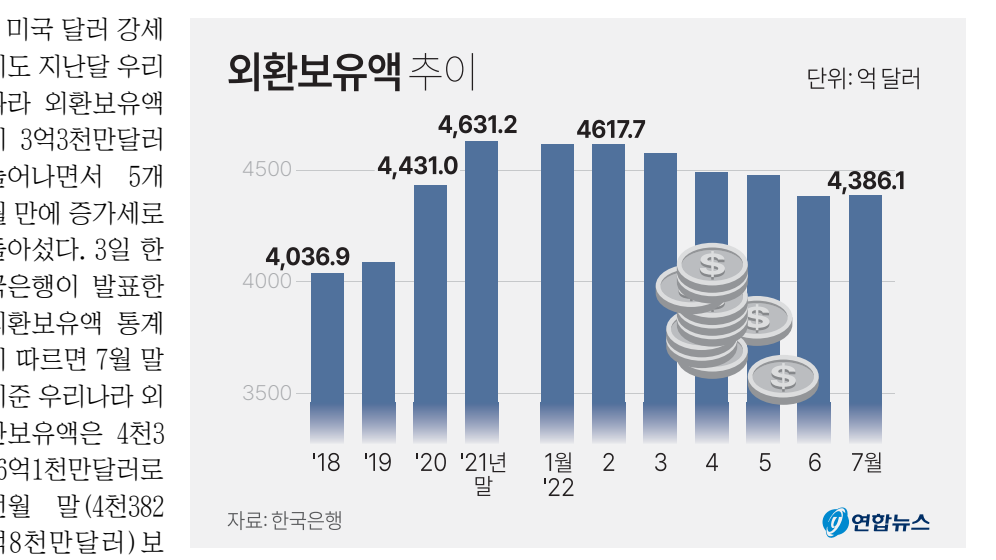
배터리가 거의 없는 긴급 상황에서 충전을 못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는 방전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광주시 자치구가 충전방해에 대해 과태료 징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가 충전할 수 없는 차량을 주차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고,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를 신고 한다면 민원인이 이를 입증해야 해서다. 실제로 7월 한 달 간 적발된 내용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간 주차’의 경우 서구에서 단 1건에 그쳤다.

현행법대로라면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해도 무관하고 14시간 이상의 기준이 1일 누적 아닌, ‘연속 14시간’이라 잠깐이라도 차를 뺐다면 다시 처음부터 주차 시간이 측정되기 때문에 사유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업무를 1명이 맡고 있는데, 민원 신고 처리와 현장 점검 등을 모두 전담해야 해 인력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 처리 외에 현장 활동은 전무하다.

차주는 고유가 속에 전기차가 친환경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다수는 충전기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도 법의 허점을 노린 알चे기를 중단해야 한다. 설치 목적대로 충전을 위해서만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개인 주차공간으로 악용해서야 되겠다. 이웃을 더 배려하는 선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7월말 외환보유액 4천386억달러...5개월 만에 증가



미국 달러 강세에도 지난해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억3천만달러 늘어나면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386억1천만달러로 전월 말(4천382억8천만달러)보다 3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원화 가치 하락) 3월 말 이후 4개월째 감소했으나 지난해 말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제·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34억2천만달러 줄어 3천91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예치금은 232억달러로, 39억8천만달러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3억7천만달러)과 특별인출권인 ‘SDR’(143억9천만달러)은 각각 6천만달러, 1억7천만달러 줄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일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 세계 9위다. 중국이 3조71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571억달러)과 스위스(9천625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는 5천841억달러를 보유해 세계 5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다

들며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만5세로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72.9%가 반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대 기조는 오늘 이 시점에서 같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육공공지원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3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만든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최근 만 5세로 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20년 뒤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 만 5살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 공부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육 주체들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 학제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사유로 ‘공교육 편입을 앞당긴 학습 격차 해소’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르다. 조기입학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조기 교육에 대한 준비 여부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어린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크다.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일 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초등학교 방과 후에 누가 자녀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는 이유에서이다. 현행 취학 아동의 돌봄 제도를 보완하지 않은 채 입학

연령만을 낮추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 시작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늦은 편은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은 초등교육을 6살에 시작하고 3-5살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받는다.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1개국(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취학연령 하향을 검토한 것은 인구고령화 때문이었다. 당시에도 유아들의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넘어야 할 과제였다. 입학생 증가에 따른 교원과 교실 부족, 대학 입시·취업 경쟁 격화 등도 속제로 지적되면서 번번이 무산된 일이다.

잘 알다시피 학제개편은 교육 과정의 틀을 모두 흔드는 일이다. 이런 일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행 시기를 못 박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다.

너무 성급했다. 문제는 정책의 결구 과정이다. 5세 취학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령 내 상시교육위원회 국정과제로도 전혀 제시된 바 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졸속이라면 그 결과는 뻔하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은 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다.’

남성속 칼럼



본사 부회장

한드위보다 더 뜨거워진 현안이 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시끄럽다. 학제 개편안은 취학 연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입시·취업·보육 등 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으로서 졸속 추진은 안된다.

만약 계획대로 실행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취학 연령이 바뀌게 된다.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행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사회의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 통해 현행 초·중·고교 학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제개편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고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도 진행한 적이 있다. 2007년 7월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아동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를 기록했다. 특히 자녀가 학제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20대의 73.0%, 30대의 67.2%가 5세 취학에 반대해 50대 60대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2006년 교육전문가

기고



윤은상

前 광주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부모들은 7-8명의 자녀를 낳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키우고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가 꿈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똑똑한 자녀는 부모의 희망이었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스스로 자립해 살아 갈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지금 성공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흑수저 출신들이다. 지금의 환경은 어쩔 그때보

희망을 주는 사람

다 더 나아졌지만, 스스로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다고 절망하며 분노한다.

세계정신건강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인구 4%인 3억2천200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이 고단함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증가시킨다. 우리 사회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 2019년 코로나19로 사회의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두드러진 두 가지 심리적인 흐름은 ‘우울과 분노’이다. 먹고 살기가 갈수록 팍팍해진 사회 현실에 대해 개인들이 갖게 된 일차적 감정 상태가 다를 아닌 우울과 분노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달라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울에 빠지게 하고 함께 경쟁했던 친구와의 삶의 격차가 멀어졌을 때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도 치유하기 쉽지

않지만, 빈부에서 오는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자가 느끼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많다. 최근 자살공화국이라 할 조션이라는 말은 이러한 우울과 분노의 감정이 만들어 낸 거친 표현들이다. 이런 세상일수록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의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살맛나게 된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꿈꾸게 하고, 선한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시공장에서 노는 아이를 향해 “시공장에서 놀아도 생각이 늘 하늘을 향하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아직도 소생할 수 있는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리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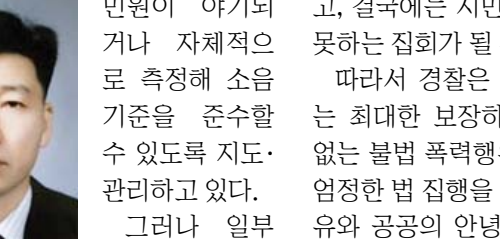
독자투고

집회 자유와 시민 평온권 보장의 시작

사회적 분열 및 갈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과정에서 사용되는 화성기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집회 시위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



민원이 야기되거나 자체적으로 추정돼 소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단체에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다수 민원을 유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집회시위 주최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화성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지만 기준 수치 이상의 과도한 화성기 사용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

고,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목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인의 권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문화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과도한 화성기 사용은 자제하고 소음 기준 수치 준수를 통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송명준·광주동부경찰서 경비직전계〉